



가톨릭 평론 제14호

ISSN : 2465-9487(Print)

제주 4·3을 아시나요? - 제주 4·3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박찬식

To cite this article : 박찬식 (2018) 제주 4·3을 아시나요? - 제주 4·3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가톨릭 평론, 14, 18-28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제주 4·3을 아시나요?

제주 4·3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 4·3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

1945년 해방 직후 제주 사회는 6만여 명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의 창궐, 극심한 흉년 같은 악재가 겹쳤으며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 경찰의 군정 경찰로 변신, 군정 관리의 모리(謀利) 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 참가했던 이들의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총을 발사함으로써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절 발포사건은 어지러운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찰 활동을 전개했고,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민·관 총파업이 이어졌다. 미군정은 이 총파업이 경찰 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한 남로당의 선

동에 있다고 분석했지만, 사후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공정책을 추진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을 모두 외지인으로 교체했고, 응원경찰(應援警察)과 서북청년회(이하 서청) 회원 등을 대거 제주로 파견해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 작전을 벌였다. 검속 한 달 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고,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다. 서청은 테러와 횡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했고, 구금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이 잇따랐다. 1948년 3월 일선 경찰지서에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해 제주 사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기상황으로 변해갔다.

대규모 학살과 공동체 파괴, 제주 4·3의 전개과정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총성과 함께 한라산 중허리의 오름마다 봉화가 신호탄으로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12개의 경찰지서와 서청 등 우익 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했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중지,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무장봉기가 발발하자 미군정은 이를 치안 상황으로 간주하고 경찰력과 서청의 증파를 통해 사태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군대에 진압출동 명령을 내렸다. 당시 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김익렬 중령은 경찰·서청과 도민의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귀순작전을 추진해 4월 말 무장대 측 책임자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대동청년단원이 일으킨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평화협상은 결렬되고, 제9연대장은 교체되었다. 미군정은 제20연대

장 브라운 대령을 제주에 파견하여 5·10선거를 추진했다.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주도의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가 투표율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다. 제주도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5·10선거를 거부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결국 5·10선거 후 강도 높은 진압작전이 전개됐다.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뛰어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했다.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소개령으로 이어졌고, 중산간 마을 주민은 해변마을로 강제 이주됐다. 10월 19일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요돌이 속에 휘말렸다. 이때부터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후 진압작전은 더욱 강경해졌다.

이와 관련,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적는다. 1948년 10월 당시 9연대 군수참모를 지냈던 김정무는 중산간마을에 불 지른 작전을 군 내부에서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했다.

“제주 4·3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군에 지시했다. 이 지시는 ‘초토화작전’이 미국과 교감 속에 진행됐음을 암시한다. 미·소 냉전이 심화하면서 아시아에 공산주의로부터 방벽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초토화작전’으로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살상이 행해졌다. ‘초토화작전’이 시작되기 전인 1948년 9월 말까지 사망자 수는 대략 1,000명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토벌대는 무장대와 민중의 연계를 막기 위해 중산간마을 주민을 해안 마을로 강제 소개(疏開)하고 100여 곳의 중산간마을을 불태웠다. 소개령이 내려졌는데도 병자·노인·어린이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은 자행되었으며, 소개령을 전달하지도 않고 방화와 학살을 저지른 곳도 많았다. 일부 중산간마을에 소개령이 전달돼 해변마을로 소개해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 한 명만 사라지면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총살했다(代殺). 이러한 소개작전은 오히려 주민이 도피해 입산하게 했다. 이는 수많은 주민의 희생과 사태의 장기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무장대의 보복 습격도 끊이지 않았다. 1948년 11월 이후 무차별 토벌작전이 벌어진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토벌대 편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한 일부 마을을 지목해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했다. 구좌면 세화리, 표선면 성읍리, 남원면 남원리·위미리 등은 ‘토벌대 진영’이라 하여 무장대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다. 주로 군·경 주둔지인데다 이들 마을에서 ‘도피자 가족’ 총살이 벌어지는 데 대한 보복이었다. 무장대

세력이 궤멸 상태에 놓인 이후에는 굶주림에 처한 잔여 무장대가 식량을 약탈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보초 서던 주민을 살해하기도 했다.

1949년 4월 1일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1948년 한 해 동안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그중 80%가 토벌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겨우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과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수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130여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됨으로써 제주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중산간 지대는 초토화의 참상을 겪었다. 11월 중순께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압군은 중산간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중산간 지대에서뿐만 아니라 해안마을에 소개한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산하는 피난민이 더욱 늘었고, 추운 겨울을 한라산 속에서 숨어다니다 잡히면 사살되거나 형무소 등지로 보내졌다. 4개월 동안 진행된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방화되었고, 마을 자체가 없어져버린 이른바 ‘잃어버린 마을’이 수십 개에 이른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됐지만,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도 강경진압을 계속했다. 군 수뇌부는 2연대의 강경작전을 위해 전투력 강화에 힘썼다. 우선 과격한 반공주의자인 서청 단원들을 군·경에 파견했다. 2연대의 3개 대대 중 3대대는 대부분 서청 단원으로 편성되었다. 토벌대는 재판 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집단으로 사살했다. 3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던 1949년 1월 17일 ‘북촌마을 사건’도 2연대 3대대에 의해 집행되었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선무를 병용하는 작전이 전개됐다. 신임 유재홍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사면정책을 발표한다. 이때 많은 주민이 하산했고,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졌다. 1949년 6월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됨으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입산자 가족 등이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붙잡혀 집단으로 희생되었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되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 4·3사건은 7년 7개월 만에 비로소 막을 내린다.

1980년대 이후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1월에 4·3특별법이 공포되었고, 2003년 10월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이 이루어졌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4·3사건의 인명 피해는 2만 5,000~3만 명으로 추정되고, 강경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만 9,285동이 소각되었다.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2014. 5. 23 현재), 희생자로 1만 4,231명과 유족 5만 9,225명이 결정됐다.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

외적 폭력에 대한 저항

4·3은 세계 냉전구도와 한국의 분단체제가 빚어낸 사생아였다. 미·소와 한반도의 남·북이 관련을 맺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주섬사람들에게만 상처를 남겨놓았다. 제주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온 이념과 공권력에 휘둘린 채 국민·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 4·3은 조선시대 이래 변방으로 취급되던 제주섬에 가해진 외적 폭력의 최종 결정판이었다.

제주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4·3은 외부로부터 압력에 저항했던 과거 전통시대 제주민란의 전형을 그대로 드러낸다. 제주의 독립·자치·자율의 전통과 연대와 공동체성이 외부의 힘에 억눌려 파괴되어갈 때 자연스레 제주민들이 저항했던 것이 4·3이었다.

70년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보건대, 제주사람들은 4·3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편입되지도 못하고 반도·폭도로 몰려 주변부와 변방으로 맴돌았다. 폭력 앞에 겁에 질려 국가 공권력을 자신을 보호해주는 제도와 장치로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순종, 중앙에서 베풀어주는 개발에 대한 추종, 중앙의 권력과 문화에 의존하려는 관성 등, 오랜 세월 제주사람들은 주권과 자치권을 갖는 근대 시민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공동체와 자존

4·3은 제주도민의 공동체적 특수성이 저변에 깔려 있는 사건이다. 다

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적 연대감, 어려운 자연조건을 개척해가는 강인함 등으로 해방공간기 한반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이러한 공동체성을 친일파와 우익청년단이 파괴하면서 4·3이 발발했고, 국가 공권력이 그 공동체를 절멸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제주도민 대다수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모른 채, 토벌대의 대학살이 한 공동체의 붕괴와 멸종으로 보였을 때, 오직 침략당한 공동체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거기에 저항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4·3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제주도민의 자존심이 담긴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 당위성이 성립된다. 4·3은 민중사적 역사 인식의 본보기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제주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항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1947년 3·1 집회 및 총파업 투쟁과 1948년 5·10 단선거부투쟁을 들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엄청난 대중동원력을 보여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3·1투쟁은 전통시대 제주도 민란과 항일운동의 전통을 이은 민중운동사의 절정이었다. 전도적(지역)·거도적(계층)으로 참여했으며, 3·10총파업에서 그것은 최고조에 달했다. 4·3의 기본적 대립구도는 제주민중과 미군정을 정점으로 한 외부세력으로 봐야 한다. 제주공동체 내부의 싸움이 아니었다.

인권과 평화

20세기 냉전체제 아래에서 제주사람들은 ‘4·3’이라는 작은 저항을 시도하다가 거대한 힘에 의한 압살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자연적 저항이 폭력에 의해 꺾이는 경험을 한 제주사람들은 인

권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20세기의 절반을 살아왔다.

무엇보다도 4·3은 엄청난 민간인학살로 점철된 인권 유린의 사태임에 주목해야 한다. 4·3은 단순한 인명살상이 아니라 조병옥 경무부장의 표현처럼 “제주도민은 다 죽여도 좋다”는 식으로 한 지역의 인간집단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드(genocide)’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령에 대한 추념을 통하여 삶과 죽음을 묵상하는 인간적·종교적 의미로서 4·3이 갖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4·3 당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와 성찰, 민족공동체로서 동질감이 있었다면 민간인 대량 학살의 사태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미군정 통치 시기에 일어난 1947년 3월 1일의 경찰 발포로 인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탄압으로 일관했다. 1948년 4·3봉기에 대해서도 김익렬 제9연대장이 주장한 선무작전을 수용했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는 비껴갔을 것이다. 신생 대한민국이 4·3을 ‘반란’으로만 여기지 않았어도 민간인 대량 학살을 가져온 초토화작전은 실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이 4·3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기본 인식이 천박함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제주사람은 반인륜적 양민학살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상투적·관념적·추상적 평화가 아니라, 몸으로 진정 평화를 갈구하고 희원한다. 평화의 섬을 거론할 때 우리는 평화라는 상징적 언어가 함축하는 내용에 주목할 것이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이 섬에 사는 제주사람이 평화의 심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보편적인 세계시민으로서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이는 후대의 교육과 계몽

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제주사람의 정신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작업이 뒷받침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4·3은 이제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평화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 근거다.

통일과 화합

4·3은 왜곡된 분단체제로 나아가던 남북한 정치권력 및 미·소군정에 대하여 민중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통일운동적 성격을 갖는다. 당시 통일의 주장은 우선 5·10 단선 반대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곧 북한체제로 통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김구·김규식 등이 나섰던 중도파의 통일논리와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평화협상이 위로부터의 움직임이었다면, 4·3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향후 통일을 향한 분위기 속에서나 통일민족국가가가 이루어지면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생적·민중적 통일운동으로 평가될 것이고, 결국 4·3은 남북한 체제 모두에게 떳떳이 역사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을 것이다.

4·3은 냉전시대의 부산물이면서 또한 민족과 지역 내부의 분열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빚어진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4·3의 해결 과정에서 민족의 통합과 국민 화합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제주도민은 4·3의 해결 과정에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특별히 강조해왔다. 이 정신이 아니었다면 특별법 제정도 대통령 사과도 불가능했다.

앞으로 4·3 논의와 인식은 폭동·항쟁의 이념 대립 구도를 넘어서는 남남화합과 남북통일의 미래지향적 ‘제3의 길’로 발전했으면 한다. 후대

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남겨진 4·3의 역사적 정명(正名) 과제 또한 이러한
틀 위에서 해결되었으면 한다.

박찬식 서강대학교 사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주대학교 연구교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제주4·3연구소장을 지냈다. 제주 신축교안, 제주 4·3에 관한 연구서를 출간한 바 있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교구 4·3 7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